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목차

I.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_____	
1. ‘신한반도체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08
[돌보기] 신한반도체제의 실천 과제	11
2. ‘평화경제’는 왜 필요한가요?	15
[돌보기] 통일경제특구와 평화관광	18
3.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왜 필요한가요?	22
4. 코로나 시대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26
5. ‘일상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29
[돌보기] 민주평통의 ‘우리고장 평화플랜’을 소개합니다.	32
6.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무엇인가요?	36
7.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39
8. 광복 100주년에 ‘원 코리아’가 가능할까요?	43
II. 남북협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_____	
1.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8
2. 북한으로 여행을 갈 수 있나요?	53
3. 남북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57
4. 접경지역 협력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61
[돌보기] DMZ 국제평화지대화란 무엇인가요?	64
5. 대북제재에서 어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나요?	70
6.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73
7. 남북 인도적 협력 및 개발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77
8.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는 가능한가요?	80
[돌보기] 올림픽으로 여는 한반도 평화여정	85
III.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_____	
1. 통치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92
2.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요?	95
3. 경제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98
4.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103
5. 코로나 시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107
6.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110

목차

IV.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1. 집을 사고 팔 수 있나요?	116
2. 교통 수단이 얼마나 다양해 졌나요?	119
돌보기 북한의 철도, 도로, 항공 실태	122
3. IT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124
4. 공연예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29
5. 방송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33
6. 패션과 뷰티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136
7. 평양시민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141
8. 대학은 어떻게 가나요?	146

V.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요?

1.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152
돌보기 대북제재 현황	155
2.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미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159
3. 북중관계가 강화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63

4. 미중갈등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68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172
6.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76
7.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179

부록

자문위원회의 역할	184
돌보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러한 조직입니다	189

그림·표

[그림 1-1]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전략·목표	14
[표 2-1]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	52
[표 5-1]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58
[표 5-2] 역대 북미 협상 주요 합의	160
[표 5-3] 역대 북중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164
[표 5-4]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2018~2019년) 주요 발언	167

I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1. ‘신한반도체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2. ‘평화경제’는 왜 필요한가요?
3.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왜 필요한가요?
4. 코로나 시대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5. ‘일상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6.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무엇인가요?
7.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8. 광복 100주년에 ‘원 코리아’가 가능할까요?

‘신한반도체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롭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00주년 3·1절 기념사, 2019.3.1.)

신한반도체제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자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갖은 고난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고, 세계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시대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지난 100년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온전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만들기 위한 비전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제100주년 3·1절 기념식(2019.3.1.)

새로운 100년의 미래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요? 새로운 한반도체제는 자유, 민주,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이끌어내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번영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의 주민이 일상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 변화, 신종 전염병 등 대내외 도전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공동

의 미래를 건설하여, 사람·물류·자본·기술·아이디어가 장벽을 넘는,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의 첫 번째 목표는 평화협력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대립을 청산하여,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공존과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역사적·민족적·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신한반도체제의 두 번째 목표는 경제협력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경제를 통합하여 경제협력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상품과 자본 및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경제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으로 새로운 경제적 허브가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의 실천 과제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00주년 3.1절 기념사, 2019.3.1.)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협력공동체와 더불어 경제협력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평화협력공동체의 실천 과제

평화협력공동체의 우선 과제는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비롯하여 평화경제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에서 서해로 이어지는 지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면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서해평화수역, 동해경제특구 등을 통해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시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인정과 체제 존중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평화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비핵화의 진전에 맞추어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국제협력의 틀 속으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선 재난·재해 협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해상구조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선순환 관계를 만드는 것 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동북아에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포괄적인 다자인간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경제협력공동체의 실천 과제

우선 한반도 차원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여, 이를 평화경제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여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경협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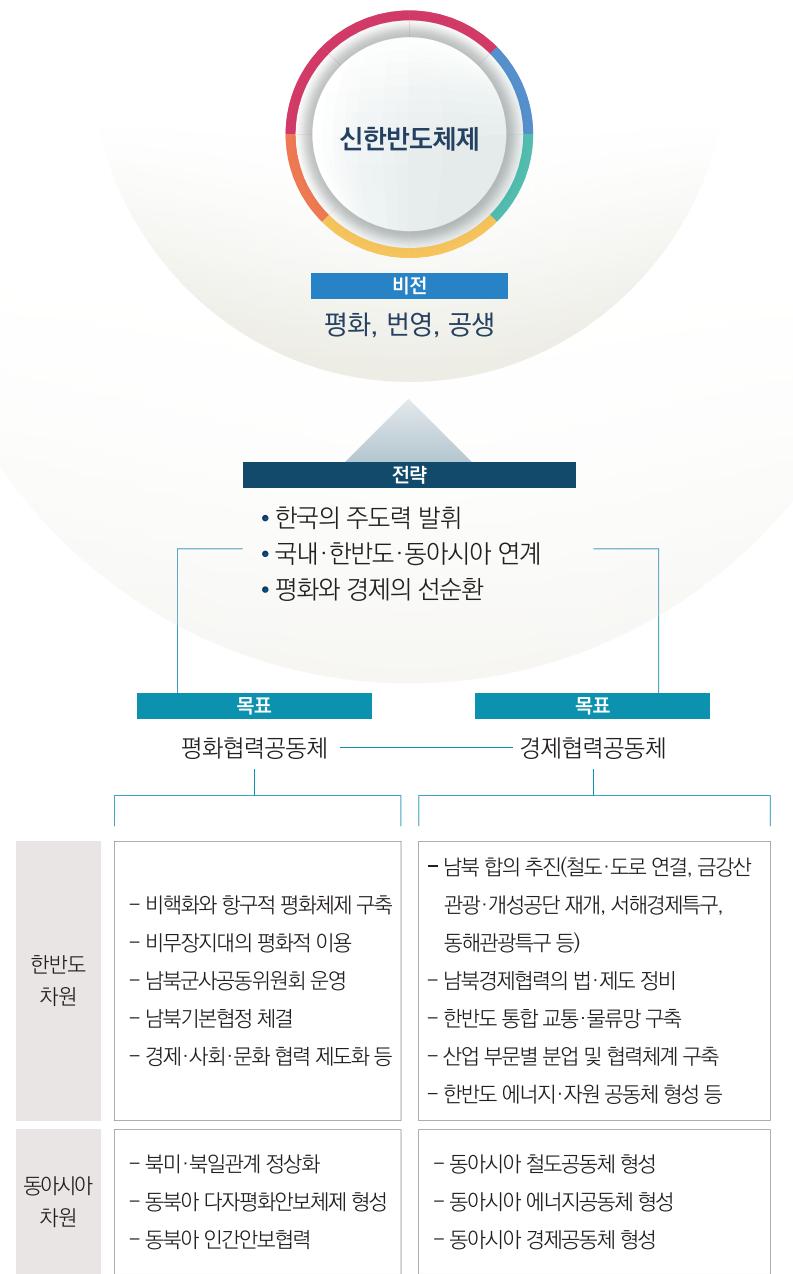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는 통합 교통·물류망을 구축하여 한반도 1일 생활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북한의 철도·도로·항만의 현대화 및 남북 통합 교통·물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남북한이 산업 부문별로 분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남북이 에너지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누누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남북 철도를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연결하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몽골과 남북한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슈퍼그리드(Super Grid)를 건설하여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를 형성하는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그림 1-1] 신한반도체제의 비전과 전략·목표



2

‘평화경제’는 왜 필요한가요?

“평화경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평화를 더 공고히 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기고문,
“평범함의 위대함: 새로운 세계질서를 생각하며”, 2019.5.7.)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순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에 의해 평화를 공고히 하는 그물망을 만들려는 것이지요.

평화와 경제는 상호적인 문제입니다.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경제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면,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토대가 굳건해 질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의 내용을 내실화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가면서, 평화와 경제가 긍정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면 무력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고,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되어 투자가 증가하고, 한반도가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은 평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사람과 기술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와 통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분쟁이 억제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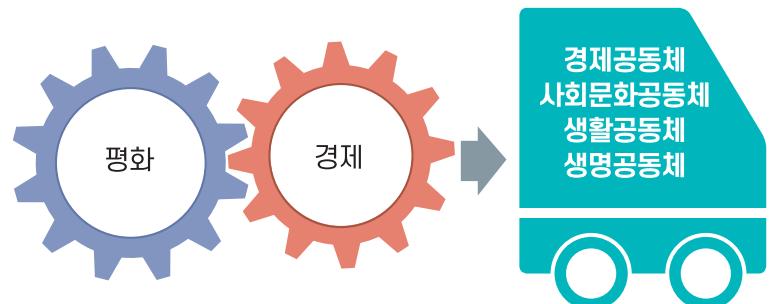
평화경제는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북한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 환경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안정되면 남북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 다원화와 주민의식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경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남북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명존중과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바람입니다.

남북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인적 교류, 정보 유통, 주민의식 변화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남북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비무장지대의 군사장비 철거 및 군부대가 이동하면 남북접경협력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 산림 협력, 전염병 방역 등은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면 남북경제협력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가 서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평화경제의 대표적인 과제는 통일경제특구와 평화관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경협의 플랫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2018.8.15.)

통일경제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개성공단은 통일경제특구의 시범 사례이자 평화경제의 모델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과 북한 근로자가 상호 원원(win-win)하는 협력모델입니다. 5만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시장경제 원리를 체험하였고,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경의선 도로·철도가 연결되었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도 있었습니다. 북한 군부대 및 장비가 후방으로 이동함으로써 서부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경제를 넘어 평화협력으로 확산되는 효과도 있는 사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1단계 개성공단 종합계획을 실현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한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고, 남북 경제특구를 확대하는 거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경제특구를 위해서는 남한의 접경지역에 경제 배후단지를 건설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배후지역과 철원, 고성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특구계획이 만나는 접점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 공동의 필요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동 이익을 나누는 경제 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신경제구상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서해권 산업·물류벨트,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접경지역 환경·관광벨트와 북한의 경제특구발전계획을 접목하여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 개성공단의 근로자들

□ 금강산관광은 평화관광의 모델

오늘날 관광은 단순한 레저사업이 아닙니다. 관광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가져 오는 다목적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광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 정보 교류, 유대감 형성, 문화적 공감 등 사회문화적 발전도 가져다줍니다. 특히 분쟁지역에서 관광은 화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북한 관광은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공감대 형성, 군사적 긴장완화, 대립문화 청산 등 복합적 의미를 지닌 평화경제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북한 관광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북한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며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북한 관광은 북한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광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가 될 것입니다. 남북 주민이 관광을 통해 만나게 된다면 평화문화 형성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관광, 금강산·설악산의 연계 관광은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공존의식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 간 인적 교류와 신뢰 구축의 본보기 사업입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남북을 연결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군사항구인 장전항이 개방되었고, 관광객 보호를 위해 군통신선도 개통되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신뢰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인도적 문제 해결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또한 원산·갈마지구와 연결되는 복합관광단지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설악산을 비롯한 동해안과 연계하는 국제적인 관광·경협 벨트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갈마관광 구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활동해권 관광·경협벨트를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평화관광지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 금강산 관광 첫 출항 모습(1998.11.8.)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왜 필요한가요?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20.9.22.)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9.23)과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설(10.8)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 하였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에 대한 관련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이고 상징적 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평화정착으로 이어지는 평화체제전환으로 가는 길의 입구입니다. 또한 이것은



▲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2020.9.22.)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체제안전 보장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대북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예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평화로 가는 일반적인 방법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종전선언 또는 종전협정을 거친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한 후, 신뢰구축을 거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중동평화를 이끌어 낸 캠프데이비드협정과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이 좋은 예입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 가까이 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

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2005년)은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대립과 불신의 그림자를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남북정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중단된 후 평화체제전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는 발판이 필요합니다. 올 연말 이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남북합의사항을 실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체결 및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종전선언이 실현된다면 하더라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정전협정은 분단을 관리하는 안전판 역할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정전협정과 무관한 한미간 안보협약입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이 채택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습니다.



▲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에서 진행한 'SNS 평화선언' 이벤트

앞으로 상황전개에 따라 남북의 종전선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 등 다양한 형태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종전선언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평화를 위한 담대한 걸음을 떼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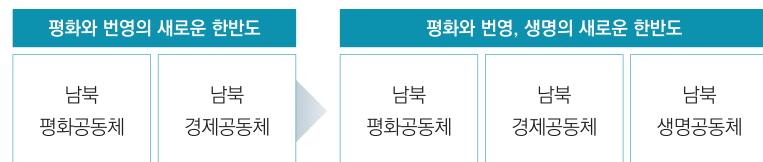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5.10.)

인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대미문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안보위협은 전쟁과 같은 전통적인 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은 전염병, 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한 인간안보가 소중해졌습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 제기된 인간안보는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는 남북관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1월 중순부터 강력한 국경봉쇄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19 방역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건의료 여건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접경지역인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북부에서 지속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남북공동방역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측의 방역과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돼지열병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방역을 통해 남과 북의 접경지역 양돈 산업을 살리는 동시에 향후 공동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전통적 안보와 인간안보의 중요성은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신한반도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의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와 더불어 생명공동체를 실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20.9.22.)에서 밝혔듯이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 민주평통 남북 보건의료협력 간담회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코로나19 방역과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있지만, 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시대에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남북 보건의료협력이 될 것입니다.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남과 북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생명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5

‘일상의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슬로포럼 기조연설 ‘국민을 위한 평화’, 2019.6.12.)

평화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생명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진정한 평화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꾸리고 일상에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국제적 차원이나 국가적 차원의 평화가 사람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평화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불편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에서 안전과 평화를 느끼는 생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평화는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간접적이고 비물리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이 제거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인간안보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 합의에 의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평화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접경지역 주

민일 것입니다. 서해 5도의 평화조성 및 조업 확대,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파주·철원·고성의 DMZ 평화돌레길 조성 등을 통해 그동안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일상생활의 고통을 해소하고 평화를 피부로 느끼는 평화 체험이 가능해진 것이죠.

접경지역에서 산불·병충해 방지, 전염병 방지, 공유하천 관리 등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는 것도 평화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동서독은 ‘접경위원회’를 설치하여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문제 등에 공동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도 남북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하루 빨리 공동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 DMZ 평화의 길 고성구간

개인이 생활 속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맞추어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은 분단의 아픈 흔적을 평화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한강하구, 강화도, 서해 5도는 분단의 현장을 평화와 협력의 장으로 만드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관심 사항과 여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평화 이슈를 발굴하고 평화담론을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운동을 추진하고, 세대별 관심에 맞춘 눈높이 평화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공존과 관용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평화를 다지는 출발점입니다.



▲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

민주평통의 ‘우리고장 평화플랜’을 소개합니다.



19기 민주평통은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일상의 평화 만들기’를 10대 주 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활동’을 전개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의 냉전 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하여 미래지향적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활동’ 차원에서 ‘우리고장 평화 플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지역주민들이 지역현장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평화과제를 발굴 및 건의하고, 이를 직접 실천하기 위한 지역의 평화플랜을 수립하여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협의회는 지자체 및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평화통일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우리고장 평화플랜’ 사업 방식은 1단계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주관으로 지역의 주민, 시민사회, 지자체, 언론들이 참여하는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지역의 평화유적 가꾸기, 평화교육 등 평화과제를 발굴 또는 공유합니다.

2단계에서 평화과제에 대한 의견을 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시민대화에서 수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담긴 평화플랜을 참가자들의 합의로 도출합니다.

3단계에서 참가자들의 제안이 담긴 정책건의를 제출하는 동시에, ‘우리고장 평화플랜’을 지역에서 실천하면서 일상에서 지역 시민들이 평화를 체감하도록 합니다.

4단계에서 ‘우리고장 평화플랜’의 수립 및 실천과정을 지역 시민사회에서 공유하면서 평화담론을 확산시키고, 향후 새로운 평화과제 발굴 및 수립계획을 제시하여 ‘우리고장 평화플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 경기도 김포시 평화플랜 시민대화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2020년에 시범적으로 경기 김포시, 경남 거제시, 전북 김제시, 충남 공주시, 대전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5개 시범지역에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시장·부시장 등 대행기관 관계자, 지역 전문가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평화의제를 발굴하는 기획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포협의회는 김포시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김포 시민대화를 진행하여 ‘평화박물관 건립’, ‘한강포구 평화의 길 조성’ 등 김포시 평화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거제협의회는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로 피난 온 사람들이 도착한 장승포항에 ‘평화벽화 그리기’ 사업을 우리고장 평화플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협의회는 북녘동포돕기 차원에서 통일 쌀을 보냈던 벽골제 김제평야 인근에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청소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주협의회에서도 공주시와 함께 공산성 유적 청소년 평화투어를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회의에서는 대전 지역의 평화 관련 스토리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광역지자체와 협의하여 평화투어사업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우리고장 평화플랜’이 생활밀착형 평화통일활동으로 전국에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기존의 지역특화사업 공모 및 지원 위주의 사업방식과 광역권 중심의 평화통일 원탁회의 진행방식을 개선시킨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수립부터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고,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체현하는 시민대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1만 9천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국내와 해외지역에서 장기간 진행한 주민 및 동포사업 경험에 기초하여 평화문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지역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일상의 평화만들기 사업인 ‘우리고장 평화플랜’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갈등과 대립의 냉전문화를 청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공존과 관용의 평화문화를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 전북 김제시에서 개최한 우리고장 평화플랜(2020.10.28.)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무엇인가요?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이며,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2019.8.15.)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협력을 연계하여 선순환하는 구도를 만들려는 플랜입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한다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땅, 하늘, 바다에서 사람과 물류가 오가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어 한반도가 유라시아,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되는 미래가 가능합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펼쳐진 우리의 방대한 꿈입니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자협력과 다자안보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열려있는 우리의 광활한 꿈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요 주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한반도 차원의 평화·번영을 동북아·동남아시아와 유라시아 차원으로 확대하여 협력망을 넓히려는 비전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북방과 남방지역으로 확대하여 활동 공간을 확장하려는 것이지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가 겹치는 접점에서 우리의 역할 공간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첫 걸음은 무역, 환경, 에너지·자원개발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평화를 정착하고, 공동 번영의 공간을 넓히려는 미래전략입니다. 북한을 다양한

형태의 양자협력과 소다자, 다자협력에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의 경중을 잘 따져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신남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신북방정책의 프로젝트 가운데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북극 항로 개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은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증대할 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경제 협력 확대,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관계 형성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방향 하에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접합하는 사업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7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우리 나라의 정치권과 국민들은 대북·통일정책의 목표, 수단, 우선순위,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등을 극복하고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경우,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학자, 정치가, 전문가가 이념과 정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을 만들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으로 서독은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동서독의 화해를 이끌어 내

고 통일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평화공존, 평화통일, 한반도 평화·번영의 대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공감대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우선 대북·통일정책에 대해 정부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가 다 층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합니다. 통일정책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부,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가 역할 분담을 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서독의 경우, 통일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야 정당이 매주 회의를 하고 정례적으로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우리도 정부와 여·야 정당이 통일문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협력정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은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통일문제의 비전, 목표, 원칙, 추진방향, 주요 과제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문제의 정쟁화(政爭化)를 방지하고 일관된 방향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 2020 울산 중구 평화통일 원탁회의



▲ 민주평통 여성시민단체 의견수렴 회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분단의 평화적 극복과 평화통일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을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결합시켜야 합니다. 민주평화시민교육을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화 문화와 민주시민 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평화시민교육을 위해 수요자 눈높이에서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이 협력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8

광복 100주년에 ‘원 코리아’가 가능할까요?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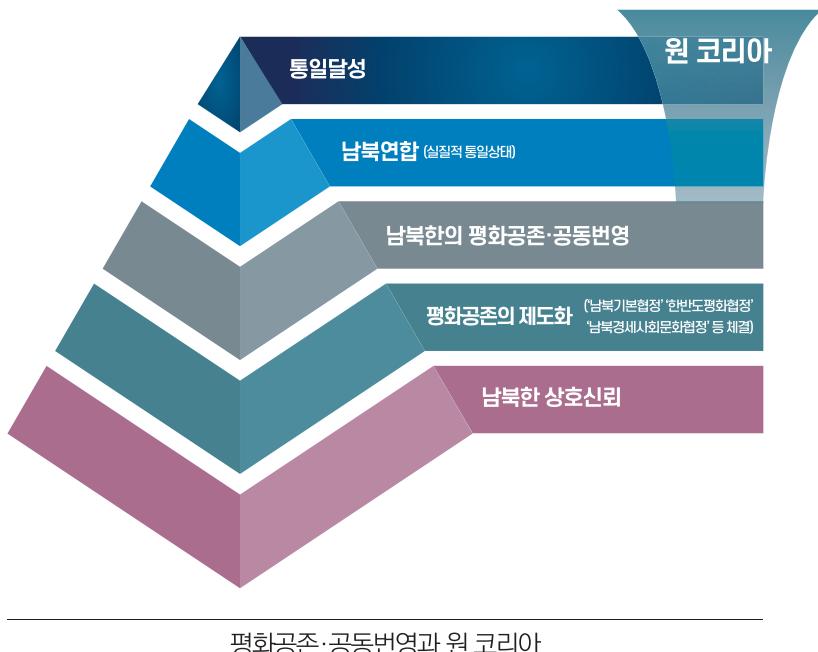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2019.8.15.)

통일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남북이 평화와 번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긴 과정입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이 평화공존을 거쳐 평화·번영을 제도화한 바탕 위에서 실질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호신뢰가 중요합니다. 상호신뢰는 상이한 이념과 가치체계, 정치·경제체제를 지닌 남북이 공존하기 위한 밑바탕입니다. 긴장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때 신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평화공존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관계의 제도적 틀, 절차, 규범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 한반도평화협정과 한반도군비통제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정과 사회문화협정을 통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경제적으로 원원(win-win)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공감하는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이 새로운 시장과 경제적 기회를 활용하고, 국방비와 같은 유형의 분단비용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교류와 문화적 공동 프로젝트를 실천함으로써 남북의 주민들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이 정착되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원 코리아’도 가능할 것입니다. ‘원 코리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아니어도 남북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통일 상태를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단계적 통일을 상정하고, 중간 단계로 남북연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제도적 틀 이자 ‘원 코리아’의 현실적 모습일 수 있습니다.

평화공존과 공생의 원칙 위에서 평화와 번영이 교차하고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 코리아’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즉 평화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통일을 달성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여러 과정을 거치더라도 남북이 공존하는 틀을 마련하고 평화적 방법에 의해 ‘원코리아’를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기보다는 남과 북이 점진적으로 결합하고 수렴되는 통합과정을 거쳐서 ‘원 코리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남북협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북한으로 여행을 갈 수 있나요?
3. 남북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4. 접경지역 협력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5. 대북제재에서 어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나요?
6.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7. 남북 인도적 협력 및 개발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8.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는 가능한가요?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그저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SNS, 2020.9.19.)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2018.4.27.)

2018년 한 해 동안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났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하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18년 5월 26일에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9월 19일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교류협력 증대,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추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에 합의하였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정상이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남북 간 중단된 협력 사업들을 복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북미관계와 병행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남북정상 간 합의를 통해 2017년 고조되었던 군사적 위기상황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 이후 남북한 군사적 적대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신뢰가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공동 유해발굴 지역의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등을 통해 남북협력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보건의료협력, 체육, 산림협력 등에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졌고, 민간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노력 등의 분야에서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코로나19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기 때문입니다.



▲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 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과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정상 간 합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조약이 양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는 독일통일의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게 된다면 한반도 정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2

북한으로 여행을 갈 수 있나요?

[표 2-1]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현황
(2020년 10월 기준)

구분	4.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민족공동행사 추진 2018 아시아경기대회 공동참가 8.15계기 이산가족, 친척 상봉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 사업(*착공식 개최) 문재인 대통령 2018년 가을 평양 방문 자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국방부장관 회담, 군사당국자 회담, 장성급 군사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9 군사합의 채택 2018년 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0.4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
후속 협의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해 평화수역화(*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실시)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 남북미중 회담 개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없는 한반도 실현 노력 단계적 군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산림분야 협력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2032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운영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 이산가족문제 해결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발사대의 영구적 폐기, 영변 핵시설 폐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북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모색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 기자회견, 2020.1.14.)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은 2000년대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이 사업들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관광은 언제쯤 그리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한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국, 호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북한지역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북한지역을 관광했다고 합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여행사는 영국인이 설립한 ‘고려투어’와 호주인이 설립한 ‘영파이어니어 투어’ 등이 있습니다.



▲ 백두산 삼지연

북한은 경제제재 상황에서 경제난 타개를 위해 관광사업에 적극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여 차례에 걸쳐 양덕, 원산, 삼지연 등 주요 관광지 개발 현장을 찾아 관광 사업을 독려했습니다. 2020년 1월에 개장한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구를 비롯하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백두산 삼지연관광지구 조성을 통해 북한의 적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소재와 테마로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은 국영여행사인 ‘조선국제여행사’ 뿐만 아니라 ‘조선국제체육여행사’, ‘평양고려국제여행사’ 등 여러 여행사를 설립했고, 칠보산, 묘향산, 백두산 등의 해당 지역의 관광을 담당하는 지역여행사도 생겨나면서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단체로 북한관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개별관광을 통해 북한관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2020년 1월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북한 개별관광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를 통한 개성·금강산 방문입니다. 둘째,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입니다.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하여 평양, 양덕, 원산·갈마, 삼지연 등의 북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입니다. 남한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2013년 뉴질랜드인 5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청진, 함흥, 백두산, 평양 등 북한 지역을 관광한 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한을 관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원산갈마 지구

2020년 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모든 국경을 봉쇄하면서 관광까지 중단된 상태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관광이 재개된다면 금강산, 개성뿐만 아니라 백두산, 원산 등의 관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은 관광 및 남북교류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남북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0.1.7.)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 남북 경제 협력 및 동북아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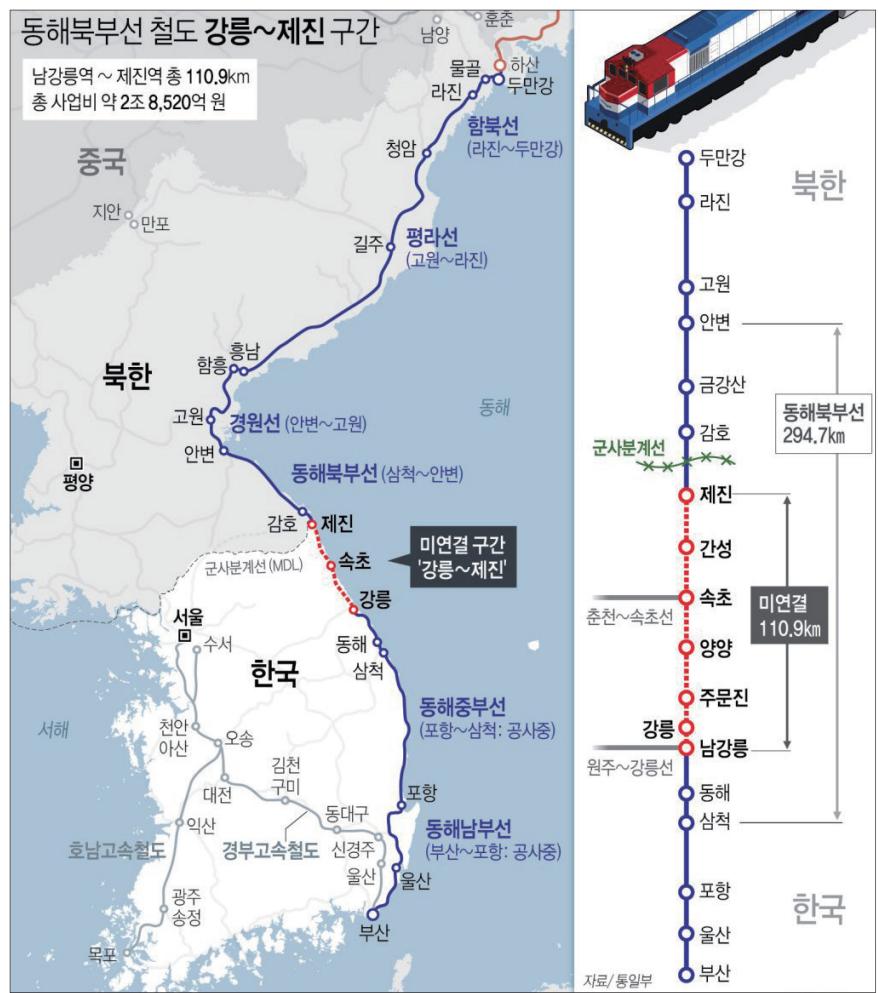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2020. 4. 27.)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평창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협력을 통해 낙후된 북한철도를 현대화하여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동북아 경제협력이 심화된다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북 철도 중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해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의선 철도는 2004년 서울~신의주 구간이 연결되었고, 2007년~2008년에는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 때문에 시설개보수 등 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8년 말 경의선의 개성~신의주 구간과 동해선의 금강산~두만강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2020년 4월 27일 동해북부선 철도연결을 위해 우선 남측의 강릉~제진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제진 구간의 철도연결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철도연결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과 활동해경제권 구축을 위한 의지를 보여 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과 북한의 경제발전을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나선, 신의주, 원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의 주요 경제특구가 동·서해 주요 교통축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북교통망 연결은 남북 경제통합의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둘째, 남북교통망 연결은 물류의 유통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경의선 현대화로 관광이익은 30년 간 약 21조, 물류비 비용 절감효과는 30년 간 약 67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셋째, 남북교통망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면 동북아 지역의 1일 생활권이 가능합니다. 한반도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등과 연결되고 도로망 연결이 된다면 이를 통해 유라시아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4

접경지역 협력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2020.1.7.)

접경지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형성된 비무장지대와 그 인접지역을 의미합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한 접경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북한에도 접경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있습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북방한계선 위쪽 약 20km 이내 지역입니다. 군사



▲ 말라리아 방역물자 북한 전달



분계선을 중심으로 형성된 접경지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역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활동이 제약을 받는 곳입니다.

접경지역 협력 사업에는 남북이 접경지역에서 진행하는 협력사업과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박적이라는 차워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차원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북 접경지역 협력 사업은 재난·재해방지, 역사, 문화, 경제,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접경지역 협력 사업은 대북제재 속에서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방지 협력 사업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홍수, 산사태,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 등에 대해 남북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 열병과 같은 경우도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

로 대처하지 않으면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3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산불을 남북이 협조하여 신속하게 진화했던 것은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개성 만월대 발굴, DMZ 남북공동 유해 발굴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발굴 및 복원과 같은 협력사업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원산 동해안 연계관광,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남북 접경지역 관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개성공단과 통일경제특구의 연계,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상호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협력 사업은 접경지역을 갈등과 대치의 공간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협력 사업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통해 남북한 공동번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북한 개성만월대 발굴 현장

DMZ 국제평화지대화란 무엇인가요?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9.9.24.)

2019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은 국제사회의 긍정적 관여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체제 안전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없애겠다는 구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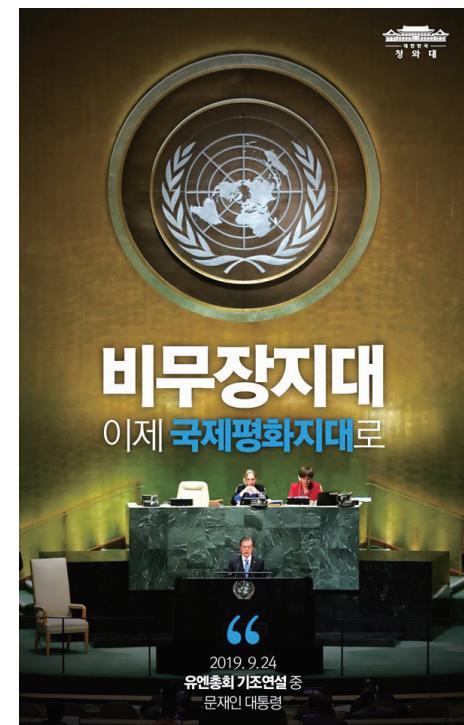
이 구상은 ‘비무장지대’라는 DMZ의 원래 의미를 살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견인하고 이를 국제적 협력으로 보장받아 평화를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새롭게 무엇을 만들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DMZ, 즉 비무장지대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밀집도가 높고, 중무기로 무장되어 군사적 긴장이 높은 비무장지대를 정상적인 비무장지대로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유엔기구 유치,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등 물리적으로 먼저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하면서, 여건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를 제도화시키자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일환입니다.

이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상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보장을 통해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할 경우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DMZ에서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데 참여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까지 달성을 수 있습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정치, 안보, 경제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에 힘입어 안보 불안 때문에 위축된 해외 투자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성·판문점 간 평화협력지구가 지정되면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DMZ가 국제평화지대로 전환되고 평화와 생태를 중시하는 국제적 연구기관 및 협력 기구들이 DMZ 인근에 유치될 경우, 무력충돌 가능성从根本上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DMZ가 단절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가 실현되면 북한에게도 안보와 경제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가 필요합니다. 개성·판문점 간 평화협력지구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대북제재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

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의 법적 관할(jurisdiction)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에 대해 유엔사로부터 일정 구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권(administration)을 위임받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해외사례 1. 독일의 그뤼네스반트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는 과거 동서독의 국경인 ‘철의 장막’으로 우리 말로 번역하면 ‘녹색 띠’, 영어로는 그린벨트(green belt)입니다. 1990년 독일통일 직후에 접경지역 일대를 그뤼네스반트로 지정하고 생태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독일통일 이전부터 그뤼네스반트 일대에서 자원 공동활용 및 상호교류협력을 추진했었고, 희귀동식물 보전을 위한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 및 복원과 관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일부 지역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내외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뤼네스반트 지역에 있는 냉전시기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여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2. 핀란드-러시아의 우정공원과 쌍둥이 공원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후 1939년 소련의 침공을 받았고, 1944년 정전협정을 맺는 등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냉전시기 1,250km에 달하는 핀란드와 러시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통행을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탈냉전 이후 현재는 생태보전을 위해 접경을 따라



▲ 독일 그린벨트, 핀란드-러시아 접경평화공원을 잇는 유럽 그린벨트

핀란드에 14개, 러시아에 6개의 보호지역을 지정하였고, 3개 지역에 우정공원(Friendship Park)과 쌍둥이 공원(Twin Parks)을 설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독일에서 시작된 유럽 그린벨트를 핀란드-러시아 접경의 보호지역에도 연결하고 확대함으로써 유럽연합(EU)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러시아 접경평화공원은 유럽연합(EU)의 지원 하에 산림보호를 위한 과학적 연구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해외사례 3. 에콰도르-페루 접경의 콘도르산맥 평화공원

에콰도르와 페루는 아마존 강 연결지역을 둘러싸고 1928년 이후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분쟁을 겪었습니다. 양국은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1999년 콘도르산맥 접경지역에 16,425km² 규모의 평화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콘도르산맥을 중심으로 에콰도르 지역에 엘콘도르 국립공원을, 페루에는 산티아고-코마이나 보존지역과 생태보호지구 등을 지정했습니다. 에콰도르-페루 접경평화공원은 국제기구 ITTO(국제열대목재기구) 및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제3국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페루 접경평화공원은 평화공원 설립을 통해 영토분쟁을 해결하고 화해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 해외사례 4. 요르단-이스라엘의 홍해해양평화공원

홍해해양평화공원(Red Sea Marine Peace Park)은 요르단과 이스라엘 양국 간 해양·연안 분쟁지역을 중립적이고 완충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평화협정’ 및 1996년 ‘아까바(Aqaba, Jordan)-아일랏(Eilat, Israel) 특별협약’에 의해 산호초 보호 및 분쟁 종식을 위해 홍해해양평화공원을 지정했습니다. 홍해해양평화공원은 해양·연안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해양평화공원입니다. 홍해평화공원 지정 후 요르단과 이스라엘 양국은 지역경제 발전 및 물류 활성화라는 경제발전의 토대를 확보하였고, 산호초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서 어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해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끌어내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대북제재는 압박보다는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병행하여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에서도 남북 간 신뢰를 조성하고 협력의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것은 제재와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019년 유니세프가 신청한 575만 달러 상당의 영양실조 아동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반출을 비롯하여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38건의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2020년에는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자금이 제재 예외 사항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이런 예입니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인도적 문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충실히 남북접촉의 끈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남북 철도연결 사업을 위한 유류 등 대북 반입제한물품에 대해서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 남북 체육교류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은 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북한 청소년들이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대회에 참가하여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협력, 전염병 확산 방지,



▲ 강원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워에서 개최된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에서 남북 선수 만남(2018.11.2.)

언어·학술교류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이산가족 상봉사업 등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제주 감귤 및 당근보내기 사업, 경남 통일딸기 사업, 경기도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대구 북한 어린이 내복보내기 운동 등이 지방 차지단체가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2019년 경기도가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와 5억 원 상당의 묘목을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비롯하여 DMZ 평화지대를 위한 접경지역 협력,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환경·산림협력, 코로나19 대처 등 전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재에 저촉되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남한의 설탕과 북한의 솔을 물물교환 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북제재에서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를 찾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가 합의되었습니다. 남북한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이 최초로 군비통제를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천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군사적 합의는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남북은 현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에 대해서 합의했으며, 대북제재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성, 철원, 파주 등 DMZ 일대에서 ‘평화의 길’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 GP 철수 남북 상호검증(2018.12.12.)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화, 남북물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사실상 전쟁상태를 종식하는 합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다음 사항들이 이행되었습니다.

첫째,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육상과 해상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비무장 지대 GP를 시범 철수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부로 남북 상호 1k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GP 22개(남한 11개, 북한 11개)를 철거했습니다. 남북이 각각 GP 1개는 역사적 상징성과 평화적 이용을 고려하여, 원형 상태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비무장지대 내에서 유해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공동유해 발굴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2020년 4월말 기준으로 유해 2,042 점과 유품 68,142점을 발굴했습니다.

셋째,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화를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서 남북 공동으로 수로조사를 진행하였고, 민간선박의 시범 항행(2019.4.1.)과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2019.7.27.)를 실시했습니다. 이 지역의 정보를 남북이 공유하였고, 시범 항행을 통해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JSA 비무장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018년 10월 27일부로 JSA 내 지뢰제거, 초소·화기 철수와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 한강하구 남북공동수로조사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JSA 남측지역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0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JSA 견학이 약 1년간 중단되었으며, 올해 11월부터 견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관광객들이 JSA 내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문서교환 형식으로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는 긴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6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9월에는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긴장상황과 우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합의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군사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우발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고 신뢰형성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남북 인도적 협력 및 개발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긴장 완화, 이질감 극복, 공동 이익 창출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과거 남북관계의 주된 영역이 인도적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남북의 공동 번영과 이익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상호관계가 필요합니다. 북한도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필요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동반자관계를 선호합니다.

1995년부터 정부와 민간단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부족 및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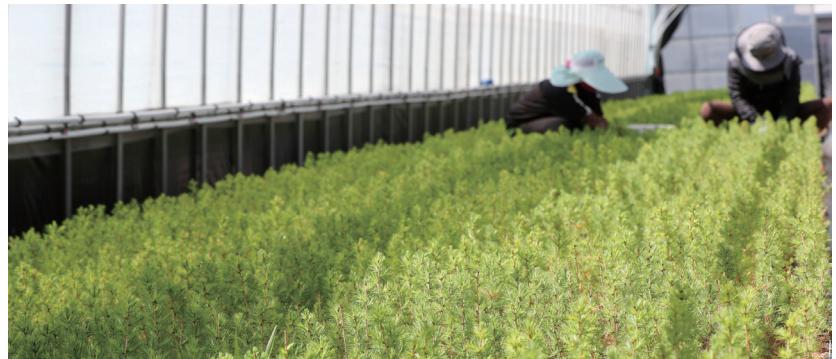


▲ 남북산립협력센터 준공식(2020.6.3.)

양결핍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규모의 쌀과 비료를 지원하여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 간 신뢰형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북 지원은 남북 간 반세기 이상 지속된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북협력은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협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 사업은 식량 및 의약품 지원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프라 건설지원, 개발역량 지원 등 개발협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식량난 해소를 위한 긴급 구호에 집중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농업복구 지원, 상하수도 개선, 산림녹화, 학교건설 등 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단순 구호사업에서 시작하여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협력 사업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개발협력 사업은 북한이 자생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인도적 협력과 개발협력은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 인도적 협력이 단기적이고 긴급구호적인 성격을 가렸다면, 개발협력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즉 일회성의 단순 지원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도움을 주는 개발협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강원 철원군 통일양묘장에서 북한 산림복구를 지원할 소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인도적 협력 및 개발협력 사업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수요,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홍수피해 복구 지원, 코로나 19 관련 보건의료 분야 등의 분야에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하겠지요.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기술과 보건의료기술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접경지역의 공동 방제와 감염병 공동 관리를 위해 인도적 협력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발협력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발협력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발협력은 남북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증대시키는 포괄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는 가능한가요?

남북 정상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4조 2항을 통해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 2019년 2월 15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일국 체육상은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의향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남북의 합의에 대해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역사적 제안’이라고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유치의사를 밝힌 도시는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스페인 마드리드, 이집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인도 룸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국 상하이, 카타르 도하, 호주 브리즈번 등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의 가능성은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대륙별 순회 개최 원칙에 따라서 2024년 파리의 유럽이나 2028년 LA가 있는 미국보다는 아시아가 유리합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중국은 2022년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

아가 최근 브라질 리아데자네이루 등 올림픽을 처음 개최하는 도시가 지니는 운영의 미숙함을 이유로, 파리나 LA처럼 올림픽 개최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치룬 서울이 포함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IOC의 새로운 변화와 지향도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IOC는 올림픽 개최를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올림픽 유치를 신청했던 로마와 부다페스트가 재정 부담과 국민적 반대로 유치경쟁을 포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IOC는 2019년 6월 올림픽 개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올림픽 정신 ‘평화’와 올림픽 유산의 활용에 무게를 두면서,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의 올림픽 경기장이나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도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



▲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민주평통 특별위원회 회의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고 있다.

습니다. 또한 ‘미래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후보도시들과 대화를 거쳐서 IOC총회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최 희망도시를 현재가 아닌, 올림픽 정신과 유산을 활용하는 미래가치로 평가하고, 대중적 지지도까지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IOC총회에서 상정하여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2020년 1월 10일 2024년 동계 유스올림픽 개최지로 강원도가 결정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한 올림픽 유산의 활용이었습니다. IOC는 동계 유스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비유럽지역 개최지로 강원도를 선정하였고, 향후 남과 북의 공동개최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인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향후 남과 북의 평화를 통해 평창부터 마식령까지 국제적인 스포츠 관광지대를 구축하여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7년 전 개최지 확정 조항’도 삭제하여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8년 LA 하계 올림픽은 올림픽 11년 전인 2017년에 결정되었습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동경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되어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서울과 평양이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7년 한반도 위기를 딛고,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저력도 있습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에 대해 서울 시민들은 60% 이상 찬성하였습니다.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기존의 체육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의 인프라로 재건설되는 서울-평양 철도·도로는 세계적으로 상징적인 올림픽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시장의 확대를 가져와서 남한의 지속적인 성장, 북한의 경제적 도약으로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도 감소시키며 한반도 번영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활성화는 세계 총생산의 1/4, 세계 교역액의 1/5, 세계 인구의 1/5이 집중된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여 있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추동할 것이며, 북한과 러시아, 몽골까지 결합시켜 현재 세계 3위의 동북아 경제권을 세계 제일의 경제권으로 부상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신흥성장지역인 아세안까지 결합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세계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 역할로 작용할 것입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프라 구비와 국민적 지지도입니다. 민주평통은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 1월 22일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남북관계 경색국면에도 국내외 지역협의회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실현하려면, 북한도 약속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유치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대한 북한 선수단의 참가가 올림픽 유치활동에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북협력을 추진하여, 당면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극복하고 북한 선수단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확정 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림픽으로 여는 한반도 평화여정



한반도와 올림픽과의 커다란 인연

우리는 올림픽과 관련한 두 차례의 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건국 이래 최대 축제라고 했던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이 있습니다. IOC와 대한민국의 노력으로 반쪽으로 치러졌던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의 갈등을 넘어 세계 평화의 제전과 동서화합의 축제로 이루어냈던 벅찬 기억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당시 역사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가하였고, 대한민국 서울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북방정책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1989년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한민족공동체통일 방안’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남과 북은 1991년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상호 인정과 평화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88올림픽 개막식

'88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1년도 남지 않았던 2017년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화염과 분노'의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누구도 평창 올림픽의 흥행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안전을 문제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의 연기와 북한의 극적인 참가로 평창 올림픽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최대의 대회를 실현하였습니다. 동시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적대적 관계를 사실상 청산하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올림픽으로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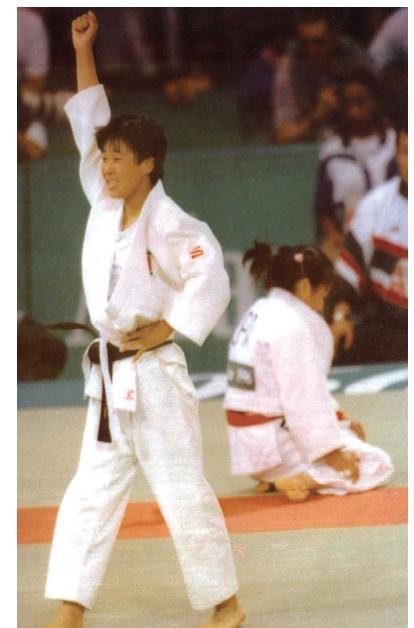
북한의 올림픽에 대한 높은 관심

이제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최 호응도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하려면 북한의 체육에 대한 생각을 파악해야 합니다. 북한은 체육을 '나라의 존엄과 기상, 국력을 힘 있게 과시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체육강국'을 건설하자는 구호 아래 체육 분야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들에게 체육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바로 올림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북한 선수는 인민체육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인민체육인은 1996년 10월 8일에 제정한 체육 분야의 최고 명예칭호이며, 일반적으로 노력영웅 훈장을 동시에 수여합니다. 공로에 따라서 고급 승용차나 아파트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북한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처음 딴 대회는 1972년 뮌헨올림픽이었습니다. 리호준이라는 사격선수로 50m 소총 복사 종목에서 600점 만점에 599점을 쏘면서 당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인민체육인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남한에서는 뮌헨올림픽 대회가 끝난 직후, 엘리트 체육인 양성을 위한 태릉선수촌을 만들고 엘리트 체육인 양성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애틀랜타 올림픽 여자 유도 48kg급에서 일본의 무적 다무라 료코를 누르고 금메달을 딴 계순희 선수

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가 된 북한 선수로 계순희도 있습니다. 계순희 선수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와일드카드로 출전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48kg급에서 일본의 유도영웅이자, 국제 대회에서 82전 전승의 무패가도를 질주하던 세계 최강 다무라 료코를 꺾고 금메달을 따면서 하루 아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1992년부터 매년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대 최우수 선수’ 10명을 발표하였는데, 계순희는 2010년 선수 은퇴까지 8차례나 최우수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북한 측 성화 봉송주자로 나섰던 그녀는 북한에서 인민체육인과 노력영웅이 되었습니다.

북한 체육계의 흐름을 볼 때, 북한이 공동올림픽에 과연 적극적으로 참여할까라는 의구심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은 체육 강국을 과시하고자, 공동올림픽 준비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가 시끄러운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지혜롭게 협력하여 훌륭한 스포츠 선수들이 재능을 발휘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적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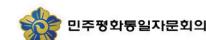
2021년이나 2022년 어느 날 서울과 평양이 함께 ‘2032 하계올림픽’을 개최한다는 발표는 세계사에 평화의 커다란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국제평화조약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유치가 결정된다면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남북의 공동 기구가 법적으로 구성되고, 선수단과 응원단의 원활한 소통을 책임지는 교통·통신망의 연결, 남북을 오가는 관광객을 위한 협조체계와 방송협력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의 통일’ 국면을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진행될 ‘2020 도쿄 하계올림픽(코로나 19로 2021년 연기 개최)’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 강원도 동계유스올

림픽’이 평화롭게 치러지도록 K-방역모델을 전파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이는 2032년 K-방역이 K-평화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분단이 100년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2045년 One Korea 실현을 촉진하는 ‘2032 서울·평양 공동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앞장서 만들어 갑니다.



III

‘김정은 시대’ 북한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1. 통치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요?
3. 경제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4.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5. 코로나 시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6.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통치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통치방식도 김정일 시대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김정은 시대 통치방식의 특징은 정상성의 회복, 경제 중시, 애민주의, 전문성과 실용성, 공개성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국가 체제의 복원, 즉 정상적인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일 시대에 군을 앞세워 국가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당과 내각의 역할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기구의 개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정책지도기관’으로 국정 전반을 관할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과 인민을 동일시하며 애민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회복입니다.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경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

입니다. 이에 따라 내각과 경제 관료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전(前) 내각 총리이자 대표적인 경제 관료인 박봉주를 포함시켰습니다. 북한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김정은, 최룡해, 박봉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명분보다 실리, 실용주의를 앞세웁니다. 집권 초 추진한 건설 사업에서 평양에 아파트와 각종 위락시설 건설부터 추진하였는데, 당과 국가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힘에 부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지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간 내 성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2020.10.10.)

당 간부 인사에서도 실용주의 경향이 나타납니다. 간부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과를 낸 간부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는 깜짝 발탁처럼 보이는 인사 교체도 살펴보면 당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낸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와 자연재해 속에서 견뎌내 온 인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신과 당의 부족한 모습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과거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정 운영에서도 나타납니다. 코로나19, 태풍 및 장마 피해와 관련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과거보다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착공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 조차 현대적인 보건의료시설이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결정 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0월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지도를 총 7번 하였는데, 그 중 9, 10월에는 수해 피해지역만 4차례 방문하여 피해복구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이러한 통치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김정일 시대와의 차별화입니다. 김정일이 보여주었던 비밀주의, 은둔형 국정운영방식을 지양하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북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요?

북한은 2019년 12월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가능한 생산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고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공세로 정면 돌파전의 승리”를 주문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019년 북미대화가 교착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북한이 선언한 ‘새로운 길’은 경제발전과 정치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대미 협상의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새로운 전략자산을 개발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고 비핵화 협상력을 높이는 공세적 전략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제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수세적 전략이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고, 경제적으로는 시간을 벌기 위한 이중전략인 셈입니다.



▲ 북한 '정면돌파전' 선전화

'새로운 길'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성능이 개량된 무기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는 전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북한은 ICBM이나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의 중점은 경제발전에 놓여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며, 경제발전을 통해 “절대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2018년에 선언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의 핵심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내부의 모든 자원을

경제에 최대한 투입하여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조선로동당 8차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앞으로도 ‘부흥번영’을 추구할 것이며, 8차 당대회에서 그 방법과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억제력 강화, 경제정책의 방향,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등 새로운 길의 구체적 모습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정은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한층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혁신’과 ‘경쟁’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정부는 기업이나 농장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낸 단위나 개인들은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혁신 경쟁에 뛰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핵심은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은 과거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추진했던 정책보다 더 큰 폭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추진, ‘실리원칙의 준수’ 그리고 무역을 포함한 ‘대외경제 관계의 확대’를 헌법에 포함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력 산업 등 국가 경제에 중추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포전담당제

김정은 시대 개혁 정책의 상징은 ‘포전담당책임제’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입니다. 각각 농장과 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 두 제도 모두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면, 기업과 농장은 추가 생산과 이윤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북한은 포전담당책임제를 통해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협동 농장 내에서 농민들을 4~5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담당 농지인 포전을 할당해 주고 있습

니다. 과거에는 10~15명을 분조로 하여 농사를 짓게 했던 방식에서 규모를 줄여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초과 생산된 농산물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를 농장원에게 배분할 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포전을 기준으로 더 많이 기여한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조달 능력에 따라 국가가 할당한 제품과 생산량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지요. 예를 들면, 금컵체육인공장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초기에는 떡, 빵, 과자와 같은 간식



▲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노동자들

들을 생산하던 공장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에서 자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품질 개선과 각종 신제품 개발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을 이용하여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높여주고 수산사업소나 식당업 같은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개방 정책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개발구의 지정입니다. 경제개발구는 경제특구의 일종으로 해외 투자 및 외국의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계획을 가진 27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가 북한 전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의 유치, 그리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대북제재로 인해 성과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경제개발구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입니다. 북한은 평양 인근 지역인 평성에 위치한 이 개발구에서 북한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북한은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원산-갈마, 삼지연, 양덕 등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죠. 2018년에는 20만 명, 2019년에는 30만 명의 해외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관광도 중단되었습니다.



▲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 현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도 북한 경제는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개혁만으로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경제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대북제재 속에서 당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4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북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과거와 같이 배급을 통해 필요한 식량과 생필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판매자로 나서서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2003년 북한이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한 이후 전국에 약 500여 개의 시장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시장은 존재하였지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지는 못했죠. 북한은 시장을 인정하면서 상인들



▲ 물건을 고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에게 시장사용료를 징수합니다. 시장사용료는 개인들이 관리하는 매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북한에는 공식적인 시장 이외에 골목시장, 야시장 등도 존재합니다.

초기 시장에서는 여성들이 판매자로 나섰습니다. 남성들은 국영 기업이나 공장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로 가내수공업으로 만든 제품이나 중국으로부터 각종 소비재를 수입하여 판매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시장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공간입니다. 북한의 신흥부유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돈주’ 중에도 여성이 상당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시장에서는 각종 생활필수품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의류, 신발, 화장품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필수품들은 거의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제품들, 예를 들면 의약품과 같은 제품들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에서 북한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주로 거래되던 중국산 의류, 신발, 화장품 등이 북한산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산 제품의 증가는 당국의 국산화 캠페인, 생산기술 향상, 공장·기업소의 경영노하우 발전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가 전반적으로 보면 김정은 시대에 시장화가 활성화되어 자원의 유통이 활발해진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의 시장

북한에서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 소속된 기업이나 농장들은 생산물 중에서 국가에 납부할 몫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의 판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시장에서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자도 몰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북한 정부가 모든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비재 중심으로 거래되는 종합시장과 기업 간 원부자재가 거래되는 물자교류시장은 원활한 유통을 위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등은 금지되고 있어 이것들은 음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활동을 통해 자금을 모은 ‘돈주’가 있어도 이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가로 성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북한의 시장에서도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국가가 직접 결정하는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실제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시장 물가는 북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들 중 하나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2020년의 경우, 연초에는 시장 물가가 불안정했지만 5월 이후부터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시장이 주요한 경제활동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북한 주민들과 기업들에게 시장은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학습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남북경제협력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코로나 시대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2020년 북한은 대북제재와 감염병, 자연재해라는 삼중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보건위기와 자연재해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평양, 원산, 백두산 지역의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지속하였고, 시장의 물가와 환율 및 식량 수급도 안정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경제가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추진한 경제 정책의 부분적 성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교역, 해외근로자의 송금 등에 힘입은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충격에 대해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1월부터 대외경제교류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던 해외관광객 유치 사업도 중단되었고, 대규모 건설 사업도



▲ 수해피해를 보도하고 있는 북한 방송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대외경제는 7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수출입 모두 70%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미 강력한 대북제재로 무역 규모가 급감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추가적인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에 더해 8월에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황해남북도 등 농경지와 북한의 주요 광물매장지역인 견덕지구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피해 지역들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부터 80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사업과 재난복구 사업, 추수를 앞둔 농업부문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는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

들 것입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대중국교역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와 부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업과 공장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북한의 자력갱생은 한계를 드러낼 것입니다.

제다가 식량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 피해는 내년 식량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물가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피해의 여파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2020년을 삼중고 속에서 보낸 북한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20년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통해 급한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8차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향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북한 '80일전투' 선전화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2000년대 들어서 북한은 21세기는 ‘지식경제시대’라고 하면서, 과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공업, 생물공학 등의 첨단산업 분야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과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제발전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고립된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전화



▲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장면

예산에서 과학 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며, ‘과학의 해’ 선정을 비롯하여 ‘전국과학기술축전’을 비롯한 전국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과학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학중시사상’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김정일은 과학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과학기술자들을 독려하는 정치적 행보를 지속하였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첨단 사업의 토대 구축’, ‘식량문제, 에너지 문제 해결, 주요 공업부문의 개선·현대화’를 목표로 다른 나라와 과학 기술 협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과 생산을 연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개선과 현대화를 통해서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추진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이 강조하는 기술교육의 발전은 3T인 정보기술(IT), 나노기

술(NT), 생물공학(BT)의 발전을 통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세계 선진수준에 올려 세우며, 인민경제의 기술개건(改建)과 현대화를 힘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자들에 대한 시혜적 조치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고,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의 최고급 아파트를 과학자들에게 우선 배급하고 있습니다. 밤섬에는 1980년대 인민대학습당에 비견되는 과학기술의 시대를 상징하는 ‘과학의 전당’을 건립하였고, 전민과학인재화, 전국 과학기술도서관 보급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력을 위해 과학기술에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컴퓨터 시범학교와 시범도시 등을 통해 컴퓨터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 대회’, ‘중학교 학생 컴퓨터프로그램 대회’ 등의 대회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분야별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군수산업 분야, 정보화, IT분야, BT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



▲ 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상징인 과학기술의 전당

고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도 비교적 바탕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간 연계성이 약하고 상업화 및 실용화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국제적 기준과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의 종합적인 수준은 전반적 국가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북한 과학기술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V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1. 집을 사고 팔 수 있나요?
2. 교통 수단이 얼마나 다양해 졌나요?
3. IT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4. 공연예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5. 방송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6. 패션과 뷰티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7. 평양시민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8. 대학은 어떻게 가나요?

집을 사고 팔 수 있나요?

북한에서 집을 사고파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저런 방법으로 집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집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의 소유이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권리인 입사증이나 이용증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택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주거는 직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택을 배정하기 때문에 직장을 배치 받으면 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장을 통해 집을 배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장 근처에 주거지를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 어디에 산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택을 배정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과학자들을 우대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고급 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미래과학자거리, 김책공업대학교원아파트, 김일성종합대학교원아파트, 은하과학자거리 등은 과학자, 교원들에게 우선 공급된 아파트들입니다.



▲ 평양 중구역 아파트

그런데 주택수급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은 북한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새로 집을 배정받아야 하거나 직장을 옮겨서 집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이 주택 상황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택 건설도 늦추어지고,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편법으로 주택입사증을 받는 방식으로 구입합니다. 최근 평양이나 지방에서 불법적인 주택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틈새시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직장에 배치된 이후에는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고 싶은 직장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협동농장에 배치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통신대학에서 기술을 전공해서 학위나 기술증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의 직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격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예술소조 활동으로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전문예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돈이 좀 있는 돈주들이 목이 좋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 방식은 우선 아파트를 지을 땅과 관련 있는 기관을 찾아가 아파트를 짓기로 합니다. 기관은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는 입사증과 관련한 행정 처리를 하고, 대가로 주택의 일부를 받습니다. 가령 100채를 지어서 30채 정도는 기관에 주고, 돈주들은 70채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국가는 별도의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아파트 100채가 공급되는 것이라서 굳이 규제할 이유도 없습니다.



▲ 접경지역의 아파트

2

교통 수단이 얼마나 다양해 졌나요?

평양에 택시가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양에서 택시라니! 택시는 누가 타고, 얼마나 있을까요?

평양에 택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몇 대 되지 않았고, 평양 시민보다 주로 외국인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용 택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서방 언론에서 올린 영상을 보면 평양에 택시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항공에서 직영하는 고려항공 택시와 대동강운수사업소 소속 택시를 비롯하여, 5개 택시회사가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차량 색깔이 다른데, 가장 많이 알려진 택시는 초록색에 노란 줄, 또는 빨간색에 초록 줄이 칠해진 비야디(BYD)라고 부르는 택시입니다. 차종은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신차가 대부분이지만, 오래된 차도 있습니다.



▲ 북한의 택시

택시 숫자도 크게 늘어서 6천 대 정도라고 합니다. 평양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호텔이나 식당, 번화가에서는 택시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택시 요금은 주간, 야간, 주중, 주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거리 4Km에 미화 2달러 정도이고, 1Km가 늘어날 때마다 0.5달러 정도씩 추가 됩니다. 장거리나 밤 9시 이후에는 할증료가 추가되는데, 평양과 지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 유로화, 중국 위안화, 북한 돈을 받습니다.

평양과 지방에도 택시회사가 있지만 도시 교통의 중심은 시내버스와 무궤도전차입니다. 무궤도전차는 글자 그대로 궤도가 없이 찻길로 다니는 전차입니다. 평양에 10여 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철도역, 지하철역, 대형 상점, 큰 산업시설, 주요 거주 지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최근에는 기능이 개선되고 세련된 새로운 형태의 전차 개발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보다 1년 앞선 1973년에 붉은별역에서 봉화역까지의 개통을 시작으로 동서와 남북을 잇는 천리마 선과 만경노선의 2개 노선에 17개의 역이 있습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평양 시민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인 동시에 관광객들이 들리는 관광명소 역할도 합니다. 최근에는 내부 조명을 밝게 하고, LED 패널을 설치하여 홍보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리모델링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경제가 확대되면서 수송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써비차’의 등장입니다. 써비차는 민간에서 돈을 받고 화물이나 사람을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북한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써비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를 줄여서 ‘써비차’라고 합니다. 1980년대 말에 등장하였는데, 지금은 북한 전역에서 써비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써비차



북한 교통의 기본은 철도입니다. 북한에서 교통은 철도와 기타 운송 수단으로 분류할 정도로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도법」 제1조에도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화물 수송의 90%, 여객 수송의 60%를 철도가 담당합니다.

철도가 북한 교통의 중심이 된 것은 지형적인 영향이 큽니다. 북한은 험준한 산악지형이 많아 철도를 중심으로 수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이지만 상황은 열악합니다. 철도의 80%가 전철로 운영하는데, 시설이 대부분이 노후하였고, 전철화가 되어 있어서 전기 사정에 따라서 운영이 끊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북한 철도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국제선 열차가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의주-단동, 만포-지안, 러시아의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로 이어지는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노선은 평양에서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동을 지나 북경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대부분 이 노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로 이어지는 철도는 시속 5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도로교통은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과 지방 도시를 잇는 구조입니다. 도로는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1978년에 평양-원산선을 개통하면서 고속도로가 추가되어 7개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는 평양-원산(청년영웅도로),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묘향산, 원산-금강산 도로

입니다. 도로는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건설되었는데, 매년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열악합니다.

도로를 이용한 통행에는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차량, 혁명전적지 참관용 차량, 긴급물자 수송차량, 시외버스, 군 작전용 차량 등 종류에 따라서 차량 이용이 통제됩니다.

항공 교통으로는 고려항공이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의 유일한 항공회사로 북한의 모든 여객운송, 화물운송, 항공기 수리를 총괄하는 ‘조선민용항공총국’의 대외 명칭이었습니다. ‘고려항공’은 2002년에 「민용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조선민용항공총국’에서 독립하여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선 관리를 비롯하여 북한의 국내노선 관리 및 항공기 수송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선양, 마카오, 방콕, 토론토, 베를린, 멕시코, 모스크바 등에 자점이 있고, 국내선으로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 공항을 소형기나 전세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철도



▲ 북한의 항공

IT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현대 사회에서 IT기술은 산업 전반부터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보통신의 발전에 맞추어 빨리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 없이 세계적인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IT기술을 생활에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0년부터 집중적으로 컴퓨터 사용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는 사회생활, 경제생활, 문화·정서생활 어느 분야에서나 쓰이지 않는 데가 없다’, ‘사람이 머리를 쓰고 일하는 곳이라면 모두 컴퓨터를 도입할 수 있고 그 덕을 단단히 볼 수 있다’면서 전 사회적으로 컴퓨터 사용을 강조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국영기업인 별이 등장하면서, ‘고려링크’, ‘강성네트’, ‘별’의 3개 통신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외부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나 구글 등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며, 물론 남한 사이트 연결도 불가능합니다.

IT는 북한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IT는 북한 주민의 일상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휴대폰입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휴대폰을 통해서 각종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뉴스와 평양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 등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조리법을 보고 요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신 휴대폰은 가볍고 성능도 좋아져서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출시된 진달래 휴대폰이나 평양 2425 휴대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로동신문』 및 주요 도서 열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시내 여객노선, 구역별 도로 및 거리 측정을 알려주는 ‘도로 안내 프로그램’, 음식 재료와 조리법을 소개한 ‘요리만들기’, 전자식 가계부인 가정주부수첩 등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망텔레비죤(IPTV)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 북한의 망 TV 다매체열람기

‘망방’입니다. 망방은 인터넷 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전화선과 고속모뎀으로 만방 열람기를 국가망과 연결하고, 열람기와 TV를 HDMI로 연결하면 여러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조선중앙텔레비죤(북한에서는 텔레비죤이라고 합니다), 만수대텔레비죤, 룽남산텔레비죤, 체육텔레비죤, 중앙방송 등입니다.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방송 프로그램과 지난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으로 인해 생겨난 변화의 하나는 금융입니다. 전자결제 카드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 조선무역은행이 ‘나래카드’를 발행하면서 카드 사용이 본격화되었는데요, 나래카드를 통해 외화가 은행으로 흡수되기 시작하자 ‘전성카드’ 등 내부용 전자결제 카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북한에서도 일상이 된 휴대폰

전자결제 카드로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 망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전자결제를 하면 배달해주는 방식의 인터넷 쇼핑몰이 생겼습니다. 내나라전자상점, 앞날전자상점 등이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인공지능(AI) 기술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를 비롯한 상품전시회나 과학기술축전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경쟁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안면인식 기술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평양에서도 컴퓨터망을 통한 통합봉사관리체계로 운영되는 자전거 렌탈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전체는 아니고 광복거리에서 시작하였는데요, ‘려명’ 자전거 카드로 임대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신청서를 가지고 평양 자전거 임대 관리소에



▲ 북한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



▲ 지능형텔레비전 소나무 광고

가서 <전성>카드로 자전거 카드를 구입한 다음 카드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광복지구 상업중심 앞, 칠골 3식료품상점 앞, 4월 15일 소년백화원 앞,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옆, 평양교예극장 앞에서 자전거를 임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 북한도 여러 분야에서 IT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IT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는 교육 분야와 일상생활 분야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교육에서 과학의 활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이후 첨단 전자칠판을 비롯하여, 가상학습교실 등 IT를 활용한 교수학습 교재가 개발되었습니다.



▲ IT 기술을 이용한 원격교육

4

공연예술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12년 7월 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처음 선을 보였던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은 아직도 화젯거리입니다. 제국주의자라고 비난하던 미국의 대중가요와 디즈니사의 만화영화 주제가를 연주하였으니, 북한 주민들은 녹화실황 방송을 보고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모란봉악단이 인기 있는 이유는 신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수들이 노래만 하였는데, 모란봉악단의 가수들은 노래하면서 춤도 춥니다. 음악도 신나고 율동도 흥겹습니다. 모란봉악단이 전국



▲ 2018년 삼지연관현악단의 <달려기자 미래로>

순회공연을 하면 공연표를 줄을 서서 구해야 하고 암표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북한의 공연을 보면 ‘세월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다리가 드러나는 짧은 바지에 민소매 차림의 옷을 입고 노래 부르는 모습에 북한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축하 공연에서 삼지연관현악단이 공연할 때만 해도 보여주기 공연이 아닌가 싶었는데, 북한에서도 이 정도의 공연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북한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로 〈달려가자 미래로〉, 〈배우자〉, 〈단숨에〉, 〈보란듯이〉 등이 있습니다. 아주 최신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창법이나 율동이 더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공연에서의 변화도 큽니다. 왕재산예술단의 현대무용 〈륜춤〉은 이런 대중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무용입니다. 〈륜춤〉은 훌루후



▲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시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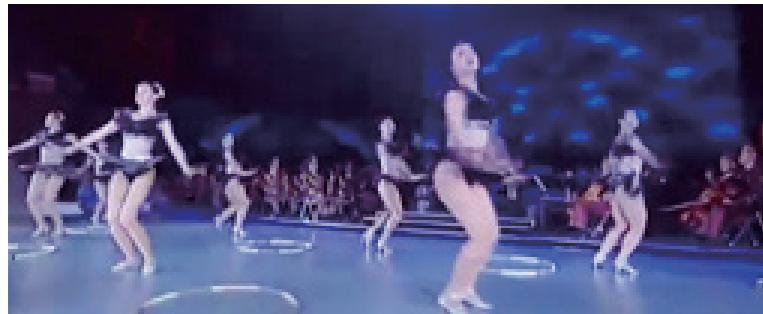
▲ 북한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 중 하나인 〈보란듯이〉

프(‘륜’)을 이용하여 기계체조를 응용한 춤입니다.

〈륜춤〉은 2016년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1만명 대공연’에서 선을 보였고, 2017년에 있었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 공연 레퍼토리로 소개되었던 현대무용입니다.

7명의 여성 무용단원이 출연하였는데, 검은색 짧은 탱크톱의 상의와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기술적인 동작으로 보여줍니다.

모든 예술에서 사상성을 중시하고 민족성을 중시하는 것이 북한 공연인데, 사상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춤을 연출한 왕재산예술단은 북한에서 현지 공연을 가장 많이 하는 예술단입니다. 200회에 가까운 순회공연을 진행하는데 지역 현지공연에서



▲ 황재산예술단의 현대무용 <룬춤>

관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공연이 달라진 것은 김정은 시기부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변화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예술이 가장 적절합니다. 음악이 달라지고, 춤추는 것이 달라지고, 무용도 달라졌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야! 이제는 정말 달라졌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변화하자는 메시지를 모란봉악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방송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김정은 시대의 변화 중에서 방송 변화도 주목됩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 방송이라고 하면 ‘대남 성명’이나 ‘국가의 중대 사항’을 전달하는 한복 입은 나이 든 아나운서가 먼저 떠오릅니다. 리춘희 아나운서는 현장에서 물러나 방송행정가로 변신하였지만, 여전히 중요한 보도를 직접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강조하는 김정은 시대의 정책 방향이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분야가 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방송 시간이 늘어났고, 방송 채널의 변화도 있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죤이 여전히 북한 방송 중에서는 전국을 시청권으로 하는 중심 방송입니다. 그런데 평양을 중심으로 만수대텔레비전, 교육문화텔레비전(룡남산텔레비전), 사회문화텔레비전, 체육텔레비전이 생겨났습니다.

우선 방송 화면이 달라졌습니다. 방송장비가 첨단으로 바뀌면서,

화면이 한층 선명하고 화려해졌습니다. 초고화질의 LED방송과 방송 진행 방식에서도 변화가 눈에 띌 정도입니다. 아직 방송의 변화가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단계 도약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자막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막을 부차적인 요소에서 나아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 활용하면서 서체나 기법에서 다양하게 자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생산 관련 등의 보도 화면에서 다양한 카메라 워킹을 통해 방송화면을 여러 각도에서 잡으면서 화면의 집중성을 높였습니다. 뉴스보도를 하면서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O/S샷(Over the Shoulder)을 적극 활용하고, 최고지도자와 관련 한 화면이 아니면 잘 잡지 않았던 단독샷이나 클로즈업 샷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 북한의 인기직업으로 떠오른 아나운서



▲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방송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들의 위치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가운데에서 방송하였는데, 요즘에는 자막이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방송의 입체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계를 통해 현장성도 높아졌습니다. 방송원들이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소식을 전하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합니다.

아나운서들도 대거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아나운서들이 세련된 복장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나운서가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광고도 생겨났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TV를 통한 광고를 50여 회 했는데 한방약 광고 20건, 가전제품 광고 7건, 화장품 광고 7건, 식품 광고 6건, 세제 광고 3건 등이었습니다. 건강과 뷰티가 가장 많은 걸 보면 남북을 막론하고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욕망은 같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패션과 뷰티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요즘 북한 사람들의 패션이 화려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사실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패션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집니다. 북한은 엄격한 규율이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 화장, 머리 스타일을 사회적 규범으로 통제합니다. 어떤 머리를 해야 하는지, 화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통제하는 기



▲ 북한 미장원의 남성 미용사



▲ 길거리를 걷고 있는 북한 여성들

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옷차림이나 화장은 곧 그 사람의 정신상태,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해이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미풍양속’, ‘사회주의 미감’, ‘사회주의 도덕 교양’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옷차림’을 통해 미감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체로 북한에서 권장하는 복식은 단정함과 간결한 복장입니다. 정숙하고 깔끔한 치마에 흰색의 블라우스 같은 차림 정도면 무난합니다. 실용적이면서 기능성을 갖춘 복장도 권장합니다. 최근에는 시장이 활성화되었는데, 시장을 통한 구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장을 통해서 일부 상류층은 고가의 외제 옷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경제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옷차림에서도 큰 차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속하는 것이 당국의 정책입니다. 획일적인 통제와 균일을 강조하던 정책에서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이 세 가지는 인민 생활에서 강조하는 정책의 핵심인데, 복식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은 이전과 비교 할 때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공식 행사에서는 여전히 한복을 행사복으로 입고, 여대생들은 검정치마에 흰 저고리를 교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복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화려하거나 튀는 패션을 금기시하였던 이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의 변화는 자발적인 동시에 정책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고 달라지기 위해서는 다



▲ 북한에서 판매하고 있는 용품들

양한 옷차림을 뒷받침할 옷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옷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은 국영기업이 중심입니다. 복장이 화려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은 이러한 옷차림을 사회적으로 허용하고, 다양한 옷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옷차림 변화는 곧 북한 체제의 정책적 변화를 염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평양의 주요 지역에는 '미용술보급소'나 편의봉사시설이 생겨났습니다. 관련 직업도 인기가 높습니다. 패션이 다양해지면서 옷차림에 맞는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품도 함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북한의 화장품

뷰티에서 주목할 만한 분야는 화장품입니다. 북한에서 화장품은 3.8국제부녀절 같은 명절에 여성들에게 내려지는 선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화장품은 사회주의 문명국에 사는 인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문명생활의 하나가 되었

습니다. 화장품 종류도 많아졌고, 기능성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북한 화장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인 ‘봄향기’입니다. 다른 브랜드는 몰라도 봄향기를 모르는 여성은 없을 정도로 북한의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브랜드로 평양화장품 공장의 ‘은하수’ 제품, 금강산합작회사의 ‘금강산’ 브랜드 제품, 묘향천호합작회사의 ‘미래’ 브랜드 화장품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김정은 시대에서 강조하는 ‘원료, 재료의 국산화’, ‘현대화’, ‘정보화’의 교시에 맞추어 세포줄기나 천연재료 등을 통해 원료의 국산화, 생산 공정의 현대화, 무인화를 추진하면서, 화장품의 상품성을 높이고 수출 품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북한의 백화점

7

평양시민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평양 시민의 생활은 지방에 사는 주민들과는 차이가 큽니다. 북한에서 평양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우선 ‘증’이 다릅니다. 평양에 사는 주민들은 ‘시민증’을 받고, 그 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공민증’을 받습니다. 평양시를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도 있습니다. 1998년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평양시관리법」이 바로 평양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뉴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봅니다. 『로동신문』인데요. 정치면이 가장 먼저 나오고, 경제 소식, 문화 소식 등이 실립니다. 최고지도자와 관련한 기사가 가장 많습니다. 요즘에는 경제 기사가 많아졌고 사회면 기사는 없습니다. 신문은 곧 교양자료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만 보면서 교양자료로 활용합니다.

평양시민들도 퇴근 길에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간단히 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술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맥주가



▲ 대동강호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북한의 젊은이들과 중국 관광객들

인기인데,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려 시원한 대동강 맥주로 피로를 씻어 내기도 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여러 물건을 한 번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이나 채소와 같은 부식품들은 식료품 상점에서 삽니다. 현금으로 사기도 하고, 국가에서 나누어 준 공급카드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제품이 나와도 알지 못했는데, 상품 광고가 많아져 새로운 제품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전후로 광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광고가 '태양열물 가열기'같이 가정에서 필요한 산업용품에 대한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일상생활 제품에 대한 광고가 늘어났습니다.

물건의 종류도 많고, 다양해져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생일이나 축하의 자리가 있으면 회식을 합니다.

여가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가 활동의 대부분은 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이나 협동조합, 학교에 군중 문화를 위한 기본시설이 있어서 탁구나 배구 같은 체육 활동이나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주말에도 갈 곳도 많아졌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유희장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원지를 보수하고 새롭게 하였습니다. 평양



▲ 북한의 대동강수산물식당

대성산에 있는 북한 최대 유원지인 대성산유원지를 비롯하여, 만경대유희장과 문수유희장 등 유희장과 텁라도유원지와 보통강유원지도 많이 찾는 유원지입니다.

학생들은 주말이면 밀린 과제나 학습을 위해 ‘과학기술전당’이나 ‘인민대학습당’을 찾기도 합니다. 인민대학습당의 멀티미디어실에서는 영화나 공연도 볼 수 있고, 어학실에서는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전당은 과학기술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자 전자도서관으로 여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북한의 문수물놀이장



▲ 북한의 중앙동물원

이처럼 평양과 지방은 생활 수준이나 편의시설, 도시인프라 등에서 차이가 매우 큽니다. 평양시민들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양 시민, 그것도 중류층 이상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가나요?

북한에서도 대학을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신 성분이 특별한 ‘혁명학원’ 출신이라면 정치 관련 학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대학은 실력이 우선입니다.

북한에서도 대학은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되고, 직장이 배치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명문대학, 명문중학교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좋은 대학으로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 북한의 중학교 수업장면



▲ 소학교 교실 수업, 수학계산 벽보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서 고급중학교는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고급중학교에서 대학교로 곧바로 진학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확실히 낮은 비율입니다.

고급중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학생을 ‘직통생’이라고 합니다. 직통생은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영재입니다. 북한에서 영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예술, 체육, 과학기술, 정보통신, 외국어 등의 분야에서 영재를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국가에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해서, 필요한 곳으로 배치합니다.

영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출신 중학교를 보면 됩니다. 숫자 1이 들어간 학교가 바로 영재학교입니다. 평양의 대표적인 영재학교로 평양 제1중학교를 비롯하여, 모란봉 제1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제1중학교는 각 행정단위 별로 1개가 있습니다. ‘제1중학교’를 졸업하면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의 대학에 입학합니다. 예술 영재들은 음악
종합대학, 미술종합대학 등의 예술학교에 입학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재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군대나 협동농장, 직장에서 추천을 받아 대학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북한의 대학 수업

중학교에서 대학으로 곧바로 진학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군대에 갑니다. 북한에서 군대는 꽤 인기 높은 직업의 하나이고, 군대를 다녀와야 제대로 대접을 받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군 복무를 합니다. 군대에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분이 불량하거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군 복무가 어려운 경우는 군대가 면제됩니다.

군대에 갔다고 해서 대학에 갈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추천제도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면 추천을 받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으로 배치된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고 모범을 보이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다닐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군대나 사회생활을 하다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복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복학생이 있죠. 우리의 복학생은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군대에 다녀오는 것이고, 북한의 복학생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군대를 다녀온다는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기간이 늘었다 줄었다 했는데, 대체로 10년으로 보면 됩니다. 10년 동안 공부하지 않다가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예비과정을 운영합니다. 1년 정도의 예비과정을 통해 대학 교육에 필요한 학습을 합니다.

V

국제사회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요?

1.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2.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미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3. 북중관계가 강화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 미중갈등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6.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대북제재는 대북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20.1.14.)



▲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엔(UN)의 다자제재와 미국 등 개별국 가가 시행하는 독자제재로 구분됩니다. 다자제재는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모든 회원국들로 구성되며, 모든 안건에 대해 회원국 모두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독자제재의 경우에는 개 별국가들이 대북제재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밝힌 대북제재의 목적은 ‘북한 정권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유엔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친밀한 국가들이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는 목적과 수단이 다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미국은 대북제재로 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과 함께 독자적 대북제재를 실시함으로써 미국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반대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12월 인도적 분야와 수출품목에 대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제재완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동참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조치에 대해 일정한 보상(제재완화, 체제보장 등)이 따르는 단계적 로드맵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조치를 언급한 것 역시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는 총 12개가 채택되었습니다. 1993년(825호)과 2006년(1699호)의 결의는 상징적 제재에 그쳤지만,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시작한 2006년 10월 이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제재의 성격도 변화했습니다. 북한의 1차(2006년), 2차(2009년), 3차(2013년)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1718호, 1874호, 2094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제재 결의(2270, 2321호 등)는 북한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제재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엔 차원의 다자제재 이외에 미국 등 개별국가의 대북 독자제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정부가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 대북제재는 총 480여건입니다. 이중에서 절반 이상인 약 258건(2017년 124건, 2018년 121건, 2019년 13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제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제재대상국인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관련국의 철저한 제재 이행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대해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는 대북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관련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동상(銅像)·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폐지(2019.12.22. 기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의 제재 대상 면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된 가장 큰 관심은,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6년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북한의 거시경제(환율, 연료, 쌀 가격 등)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제재에 의해 자신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항복을 요구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2019년에 중국, 러시아와 수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 혹은 면제 조치를 통해 북미 간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 폐기와 제재 완화가 동시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남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대북제재의

원칙은 준수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미국이 대북제재 관련 법안을 선제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미국이 독자 제재를 잠정적으로 유예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면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위기를 감안하여, 2020년 3월말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유예함으로써 식품이나 보건의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올해 3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돋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 등 국제기구 및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한국의 비영리 민간단체가 신청한 '대북 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 바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표 5-1]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현황 및 주요 내용

결의(채택일)	사유	주요 내용
◦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제재 중심		
825호 (1993.5.11.)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NPT 탈퇴 선언 재고 요청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 요청
1695호 (2006.7.15.)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 차원의 첫 규탄 대량살상무기 관련 재정적 지원 이전 금지
1718호 (2006.10.14.)	1차 북핵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의 구체적 대북제재 대북제재위원회 구성 군수품·사치품 등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1874호 (2009.6.12.)	2차 북핵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적 무기 금수 조치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제재
2087호 (2013.1.13.)	은하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의 위반시 '중대조치' 조항 추가 벌크캐시 및 캐치올 조항 추가
2094호 (2013.3.7.)	3차 북핵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 중지 의심 선박 및 화물 의무 검색
◦ 2016년 4차 북핵실험 이후 포괄적 제재로 확대		
2270호 (2016.3.2.)	4차 북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권고 아닌 의무) 北 정부·노동당 자산 동결 북한 출입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석탄·철광 수출 금지 등
2321호 (2016.11.30.)	5차 북핵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협력 금지 북한 은·동·아연 등 추가 수출 금지 북한의 외화 수입 차단
2356호 (2017.6.2.)	중·단거리미사일 수시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은행 등 기관 4곳,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개인 14명 제재 목록에 추가
2371호 (2017.8.5.)	ICBM급미사일 시험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산 수산물 수출 금지 노동자 고용 수준 동결 제재 금지활동 연관 선박 입항 불허
2375호 (2017.9.11.)	6차 북핵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유공급 연간 400만배럴로 동결 정유제품 공급 55% 감축 섬유제품 해외 수출 전면 금지
2397호 (2017.12.22.)	ICBM급미사일 시험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50만배럴로 감축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 24개월 이내 귀환

2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북미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2019.6.12.)

2018년 시작된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핵화 방식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선(先)비핵화~후(後)체제안전보장’이라는 빅딜(일괄타결)식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실시했으며, 영변 핵시설 해체를 비핵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스몰딜(단계적 동시이행)식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표 5-2] 역대 북미 협상 주요 합의

구분	북미 제네바합의문 (1994.10.21.)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2005.9.19.)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2018.6.12.)
관계 정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 하는 데로 나아간다.”“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관계를 수립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국과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상황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북미협상 타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북한은 정상 간 합의 후에 실무자들이 후속협의를 진행했던 방식(top-down)을 선호할 것입니다. 미국은 기존의 탑다운 방식과 함께 단계적 실무협상을 거친 후에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는 방식(bottom-up)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핵화, 평화와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상방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한다.”“6자는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타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가 되면 미국 신행정부의 새로운 한반도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향후 북미 간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측이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핵화의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차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핵화의 대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재완화에 대한 입장 차이입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2016년 이후에 채택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상황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북미협상 타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북한은 정상 간 합의 후에 실무자들이 후속협의를 진행했던 방식(top-down)을 선호할 것입니다. 미국은 기존의 탑다운 방식과 함께 단계적 실무협상을 거친 후에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하는 방식(bottom-up)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미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타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내년 상반기가 되면 미국 신행정부의 새로운 한반도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향후 북미 간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측이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2.12.)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에 입각하여 미국 신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단계적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한 간 정치·군사적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킴으로써 북미협상 지연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막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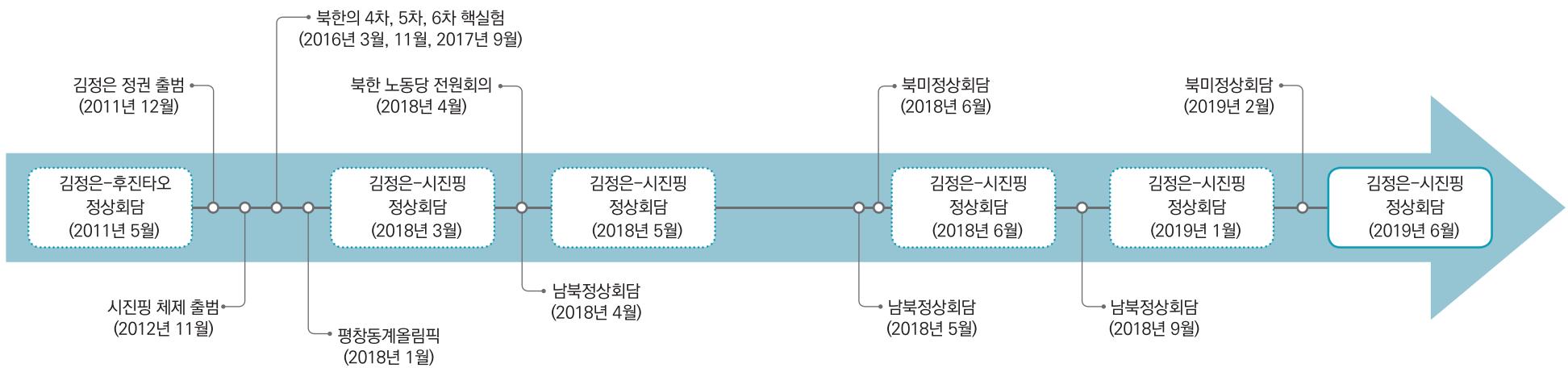
3

북중관계가 강화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과 중국은 오랫동안 ‘헬맹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92년 한중수교와 2000년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한반도에서 평화무드가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북중수교 70주년인 2019년에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전통적인



▲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표 5-3] 역대 북중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은 ‘친서 외교’를 통해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중이 오랜 경색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중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하고 비핵화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의 회복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유지하고자 합니다.

북중관계가 밀착된다는 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대미관계 등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북중관계의 공고화는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협과 기회요인이 모두 존재합니다.

먼저, 북중관계가 공고화되면 대북제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하고 중국이 이에 호응하여 북한과 공식적·비공식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북중 관계가 강화될수록 남북 경협의 메리트가 낮아질 가능성성이 있다 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북중관계가 공고화되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북한이 대중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틈새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비핵화 및 한반도평화를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남북 및 남북미 3자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및 북미 간 대화를 진행하는 한편,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동북 3성 지역에서 남북중 3각 협력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협력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표 5-4]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2018~2019년) 주요 발언

일시	주요 발언
2018. 3.25.~3.28. (베이징)	시진핑: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김정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을 받들어 한반도 비핵화에 노력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2018. 5.7.~5.8. (다롄)	시진핑: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실현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
2018. 6.19.~6.20. (베이징)	시진핑: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조선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하며 향후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 김정은: “조선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비롯한 공동의 관심사에 관하여 유익한 의견교환이 진행되었으며 공통된 인식을 이룩하였다.”
2019. 1.8.~1.9. (베이징)	시진핑: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남북한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기를 지지하고, 유관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
2019.6.	시진핑: “중국공산당·정부가 북중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인민의 북한인민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도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지지 역시 변하지 않을 것”

미중갈등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중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고, 2019년에는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제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도 미중 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치열한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고, 홍콩이나 대만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합니다. 올해 7월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영사관을 스파이 혐의를 이유로 폐쇄했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청두 주재 미국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미중 갈등은 무역통상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분야와 체제경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중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국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이 자국에게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경제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국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다고 보고 그 틈을 자신들이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당장은 미국에



▲ 중국 쓰촨성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에서 한 인부가 현판을 제거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대항하지는 않지만,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력을 키운다면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경에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중갈등 심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중 ‘신냉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핵심이익을 둘러싼 경쟁을 지속하고, 갈등 추세도 심해지겠지만, 전면적인 ‘충돌’이나 ‘전쟁’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모두 전면적인 충돌이 국익을 해치고 국제사회에 가져올 충격이 너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미중갈등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겠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익을 위해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중갈등이 심화되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중갈등이 심화되면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양국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을 자신들의 세력권 혹은 영향력 아래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에도 한국이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여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동참 내지 협력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향후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미중갈등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하여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아세안, 유럽연합 등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한국외교를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단선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국익에 기반하여 다층적·입체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중갈등의 심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핵화해법과 관련하여 미중 간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에게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북미협상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한미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한중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미중갈등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남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 간 정치적·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북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남북 양측의 수요(needs)와 필요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2020.1.7.)

한미관계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동맹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변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협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한미동맹이 70년 가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한국의 국가역량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죠.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외 전략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군사적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안보 위협, 재난·재해 등과 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은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며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적 위협도



▲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전화통화(2020.11.12.)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내용과 역할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위상과 역할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이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국의 국민 대부분은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고, 특히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 대북정책 등에 대해서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외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미 간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협상 대표단이 제11차 SMA 협상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스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남북 접경지역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유엔사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외교안보정책의 목표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우리도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상호 주권 존중과 호혜 평등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한미동맹을 좀 더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미가 양국 간 핵심의제인 방위비분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동맹대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도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한미는 연합군사훈련을 축소 내지 조정함으로써 비핵화협상 및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비핵화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하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0.9.23.)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되고 있고 남북관계도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국제질서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교착 국면을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반도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남북협력에서 탈피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3자, 또는 4자 협력, 국제기구와의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남북협력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

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남북 협력 사업은 보건의료분야입니다. 특히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이 아니라 다자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항생제 등 필수 의약품, 감염병 예방 접종, 안전한 식수공급 등은 제재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나 몽골을 통로로 하여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을 제공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모색을 위한 2020 한중일 평화포럼(2020.10.27.)

관광 사업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우리 단독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 러시아 등 제 3국을 통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이나 학술교류 등과 관광을 매칭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관광, 남북중 혹은 남북러 접경지역에서 관광분야 학술행사 개최, 접경지역 관광 투어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북 식량지원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으로 농업발전을 촉진하는 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긴급구호, 취약계층 지원, 경제개발 등에 초점을 둔 ‘패키지형’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관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경제 지식공유사업(KSP)을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지식공유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이나 국제기구(ESCAP), 국제비정부기구(INGOs) 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7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를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요?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 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19.10.22.)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는 정부가 상대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입니다. 공공외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상대국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입니다. 다만, 공공외교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국민 개인, 지방자치단체, 기업, NGO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번영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및 국내적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도전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간 외교 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 민주평통 대미 공공외교 워크숍(2020.2.22.)

먼저, 공공외교의 대상국을 다각화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공공외교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미중일러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양한 지역 및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지지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동남아지역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하겠지요. 동남아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곳이지만,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미중일 3국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한 공공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외교의 키워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으

면서도 한반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평화, 인권, 환경, 글로벌 보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평화공공외교’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경험(K-방역모델)을 ‘평화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의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의 공공외교가 상대국의 주류 정치인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자, 언론계, 경제계, 민간단체,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과 같이 여론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공공외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효과가 클 것입니다.



▲ 워싱턴 협의회의 공공외교 활동

부록

자문위원의 역할

한반도 평화공공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타 정부부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민간 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국의 여론 주도층, 정책연구기관, 국제비정부기구(INGOs) 등과 연대를 통해 공공외교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약 124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민주평통의 해외자문위원은 740만 해외동포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외교의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문위원의 역할을 말씀드리기 전에 민주평통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려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은 우선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 도출과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민주평통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 나가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 민주평통 수성구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온·오프라인 병행)

자문위원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뜻 감이 안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하고 통일여론을 수렴하여,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려는 대통령께 자문과 건의를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자문·건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전체회의·지역회의·정기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건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을 정책건의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평소에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통일여론을 수렴하고, 이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더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건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지역협의회별로 토론을 통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책건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정기회의는 자문위원 한명 한명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는, 풀뿌리 정책건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전체회의와 지역회의는 모두 2년에 한번 개최되며, 지역회의는 국내지역은 18개 지역회의 별로, 해외지역은 5개 지역회의 별로 각각 개최됩니다. 전체회의는 2만여 전 자문위원 모두가 함께 모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가장 큰 회의입니다.

둘째, ‘현장 밀착형 수시 정책건의’를 통해 자문·건의를 할 수 있

습니다. 민주평통에서는 각종 이슈나 지역 현안, 사업아이디어 등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일상 생활현장과 각종 모임에서 느끼는 의견들을 수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한 생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국민이 만드는 평화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현안과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연계시키는 창의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제주 감귤 북녘 보내기’사업과 같은 지역적으로 특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하거나, 지역의 평화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사업으로 건의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정책건의 창구’, ‘분기별 모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자문·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마련된 통일정책제안 코너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통일정책제안 코너에 의견을 게시하면 사무처에서 제안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기정책건의 또는 수



▲ 충북지역 통일정책 자문건의 및 의견수렴 좌담회



▲ 전주에서 열린 2020 한반도 평화원정대

시정책 건의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자문위원과 국민들의 통일여론을 파악합니다. 이처럼 민주평통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문·건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평통의 두 번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은 소속 지역협의회의 다양한 통일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민주평통에서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민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별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통일공감 확산에 힘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생각을 듣고, 이에 따라 자문
전의 역량도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헌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주
인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민주
평통은 자문위원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문위원 여러분
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자문위
원으로서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냉전과 대립의 문화
를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평화의 길잡이로서 모범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문위원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평통의 주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
지고, 가족과 친구 등 주변사람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
리고, 지역사회에 화해와 통합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때, 우리
는 평화와 통일에 한걸음 다가갈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러한 조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인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
과 국민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국내외 각계각
층의 지도급 인사 2만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조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범국민적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진 조직입니다. 국내는 17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에, 해외는 미주·유럽 등 주요 5개 지역에 지역회의를 두고 있고, 자문위원들은 국내 228개 시·군·구 및 해외 43개 주요 권역의 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평통의 조직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정립하고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별로 정책건의를 담당하는 10개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자문위원 중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는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분과위원은 상임위원 중 위원의 경력·직책 및 출신 지역을 고려하여 수석부의장이 선임합니다.

지역에도 별도로 지역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회의에는 당해 부의장과 소속 협의회장 등으로 해당지역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역협의회에는 소속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해당지역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역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건의 또는 보고할 사항을 심의·의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민주평통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상향식 정책건의를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러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자문건의를 위한 각종 회의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각종 시민단체, 연구소, 학회 등과의 공론화 토론을 통해 국민의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는 ‘평화통일원탁회의’와 ‘평화통일포럼’과 같은 사업에서부터 일반시민에게 평화·통일정책과 국제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과 같은 교육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청소년들의 통일인식을 개선하고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학생 통일공감 토크쇼’, ‘청년 페스티벌’ 등 다양한 청년·청소년 공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기 민주평통의 구성과 자문위원의 예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기 민주평통은 총 19,000명(국내 15,400명, 해외 3,60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성별·세대별 균형을 이루고, 통일미래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국민조직으로 변화하고자 18기 대비 여성·청년 자문위원 비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자문위원은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받고 자문위원증과 배지가 지금 됩니다. 또한 기관지 〈통일시대〉 및 각종 통일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으며, 자문위원 연수와 같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화통일기반 구축 활동에 공적이 탁월한 자문위원은 훈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현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우) 04605 서울특별시 종구 장충단로 84

전 화 02-2250-2300

발 행 2020년 11월

디자인·제작 (주)늘품플러스 02-2275-5326

* 동 자료집은 '2019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연수'에서 질의된 주요내용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견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